

아시아적 가치와 한국의 여성결혼 이주자 정책

문 영 희*

目 次

- I. 문제제기
- II. 아시아적 가치와 인권
- III. 한국의 여성결혼이주자 정책과 아시아적 가치
- IV. 맺는말

국문초록

오늘날 인권이념은 세계적인 정치담론으로 발전한다.

오랜 서구전통의 자유주의 인권개념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됨으로서 세계의 보편적 인간존엄의 가치로서 각국의 헌법의 기초개념이 되었고, 전 인류의 보편적인 선언이자, 동시에 국제법적 실체가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인권이념은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두개의 가치가 서로 대치한다. 곧 개인주의적 가치옹호의 자유주의 보편적 인권이념에 근거하여, 타국의 정치적 간섭 또는 전쟁을 통해서라도 기본권이나 민주주의체제가 옹호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대항담론으로서 공동체 주의적 가치를 옹호하고 자국의 정치적 자위권과 문화적 전통의 자부심에 근거하여 인권의 도구화에 맞선 문화의 이데올로기화, 곧 '아시아적 가치론'이 등장하여 대치하는 것이다

90년대 초반이후 아시아, 특히 한국의 지식인들 사이에 이러한 논쟁은 크게 쟁점화 되어 수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주된 논쟁은 아시아적 가치를 둘러싼 정치적, 문화적, 이념적 찬반논쟁이 대부분으로 구체적, 분석적 개념이 아닌 추상적 맥락의 의존적인 개념이며, 주로 선형적 규정이나 구상형태로 정립된 '가치 개입적' 개념

*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으로, 분석적용 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분석되어야 할 '거대담론' 형태이다. 그 결과 다양하게 제기된 제언이나 구상에 비해 경험적 실체에 적용한 분석 작업들이 축적되지 못하였다. 최근에 학자들은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떠나 아시아적 가치를 세분화시켜 정치동학측면에서 구체적 객관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글은 왜 아시아적 가치가 서구 자유주의와 다른지를 설명해주는 아시아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차이점,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정면으로 다루어지지 않았고 간과되었던 차이점인 여성의 역할과 관련된다. 이 부분이야 말로 경제와 정치 양쪽에 모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가치의 한 예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주민의 인권과 관련하여 이주여성의 문제를 가지고 아시아의 가치를 재검토한다. 따라서 아시아적 가치를 유교의 가치와 동일시한다는 전제에서 분석대상을 오늘날 유교문화의 새로운 정착종주국이며, 오히려 유교문화를 역수출하는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 대책'으로 한다.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수립내용을 검토하고, 아시아적 가치의 핵심인 유교전통에 의한 내용들을 밝혀본다. 아울러 유교적 전통에 기반 한 아시아적 가치는 보편적 인권이념으로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유교적 전통질서에 의한 인권유린이 정당화 된다는 것을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주제어 : 인권, 자유주의, 아시아적 가치,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정책

1. 서론

오늘날 인권은 세계적인 정치적 담론으로 발전한다. 특히 냉전종식 후 인권문제는 국제관계의 큰 이슈로 등장하여 각국은 인권보호와 증진을 통한 국제질서 및 평화유지라는 가치를 내걸어 공동보조를 취해 인권침해에 심각한 대응을 하고 있다.

가장 오랜 역사를 갖는 서구전통의 자유주의 인권개념이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됨으로서 인권은 보편적 인간존엄의 가치로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선언이자, 동시에 국제법적 실체가 되었다. 세계인권 선언이후 1966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사회권협약)과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자유권협약)과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가 채택되고, 1976년 발효됨으로서 각 가맹국의 광범위한 인권의 인정과 보호할 의무에 대한 이론적,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 현대의 대부분 국가들은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여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비난과 제재조치를 강

화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인권이념은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두 개의 가치가 서로 대치한다. 곧 개인주의적 가치를 옹호하는 자유주의 보편적 인권이념에 근거하여 타국의 정치적 간섭 또는 전쟁을 통해서라도 기본권이나 민주주의체제가 옹호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대항담론으로서 공동체 주의적 가치를 옹호하고 자국의 정치적 자위권과 문화적 전통의 자부심에 근거하여 인권의 도구화에 맞선 문화의 이데올로기화, 곧 '아시아적 가치론'이 등장하여 대치하는 것이다.

90년대 초반부터 아시아에서 특히, 한국의 지식인들 사이에 이러한 논쟁의 쟁점은 활발히 논의 되고, 수많은 연구가 있어왔다.¹⁾ 그러나 그동안의 주된 논쟁은 아시아적 가치를 둘러싼 정치, 문화, 이념적 찬 반 논쟁이 대부분이다. 구체적 그리고 분석적 개념이 아닌 추상적 맥락의 의존적 개념이며, 주로 선형적 규정이나 구상형태로 정립된 '가치개입적' 개념으로서,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분석되어야 할 '거대담론'형식으로 존재해 왔다. 그 결과 다양하게 제기된 제안이나 구상에 비해 경험적 실제에 적용한 분석 작업이 축적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최근 학자들은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떠나 아시아적 가치를 세분화시켜 정치동학측면에서 구체적, 객관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²⁾

이같은 아시아적 가치가 왜 서구의 자유주의와 다른지를 설명해주는 아시아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차이점,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정면으로 다루어지지 않았고 간과되었던 차이점인 여성의 역할과 관련된다. 이 부분이야 말로 경제와 정치 양쪽에 모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가치의 한 예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인권과 아울러 또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주민의 인권과 관련하여 이주여성의 문제를 가지고 아시아의 가치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의 가치를 유교의 가치와 동일시한다는 전제에서 분석대상을 유교문화의 새로운 정착 종주국이며 오히려 유교문화를 역수출하는 한국³⁾의 2006년 4월26일에 발표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 대책>으로 한다. 따라서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수립내용을 검토하고, 아시아적 가치의 핵심인 유교전통에 의한

- 1) 이승환 외(1999), 「아시아적 가치」는 부록으로 아시아적 가치와 관련된 국내논문 70여 편을 소개하고 있고, 한국동북아지식연대.(2004), 「동북아 공동체를 향하여」.에서는 논문170여 편을 소개한다.
- 2)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창희, "아시아적 가치와 경제성장의 정치적 동학-분석의 필요성과 가능성 「대한정치학회보」, 14집 1호, 2006, p71-93
- 3) 사회주의체제 과정을 통한 이데올로기화로 중국은 이미 아시아적 가치의 옛 종주국이 되었고, 한류현상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은 근대화 산업화 과정 속에서 잊혀져가는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람, 경로효친, 권선징악, 충효가 동남아의 전통적 미풍양속의 정서, 문화적 동질성과 공감대가 한류의 비결이라고 한다.

내용들을 밝혀본다. 아울러 유교적 전통에 기반 한 아시아적 가치가 보편적 인권이념으로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유교적 전통질서에 의한 인권유린이 정당화 된다는 것을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지금까지 수많은 아시아적 가치론에 대한 연구들이 구체적, 분석적 개념이 아닌 추상적 맥락의 의존적 개념으로, 주로 선형적 규정이나 구상형태로 정립된 '가치개입적' 개념으로서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분석되어야 할 '거대담론' 형태로 존재해 왔다는 점에서 아시아적 가치를 여성 인권과 관련하여 한국의 여설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 대책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II. 아시아적 가치와 인권

1. 보편적 자유주의 인권개념에 도전하는 아시아적 가치

인권이란 “인간인 이상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누구나 갖는다고 추정되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이 함축된 의미 속에 인권은 인류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타당성을 가지며, 인간이 갖는 권리인 만큼 그 발생의 근원을 인간성에 두고 있고, 삶의 모든 영역이 인권의 대상이 되며, 인간의 삶이 여러 사회적 층위로 구성되는 만큼 일종의 중층구조를 갖는다. 또한 인간의 삶이 사회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발생과 실현을 위해서 특정사회와 사회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인권의 개념은 몇 가지 특성을 갖는다. 곧 인간 모두에게 타당하다는 점에서 보편성과 인권의 주체로서 인간의 삶은 조건이나 능력, 삶의 내용에서 개별자적 복수의 인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특수성을 갖는다. 또한 삶의 전영역이 인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포괄성과 본원성을 갖는다. 한편 규범성의 측면에서 볼 때 도덕성과 제도초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곧 인권의 도덕성과 제도초월성은 법과 제도의 정당한 기준을 제공하는 반면 인권기준에 반하는 제도를 혁파 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을 제공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주의는 18-19C 서유럽의 시민 혁명기에 등장한 정치, 경제, 사회 사상으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개인에게 우선성을 부여하고 이를 기초로 한 사회구성원리를 구축하는 정치이념이다. 자유주의는 오늘날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범가치이며, 핵심적 가치는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 곧 “근대적인 인간의 권리”이다. 이러한 근대적 인간관은 서구의 역사적 전개, 곧 봉건영주와의 투쟁, 농민반란, 무역화

대, 르네상스, 절대군주제, 종교개혁 등을 통해 시민권에 대한 각성과 인본주의사상이 대두되면서, 홉스, 로크, 루소 등 계몽주의 사상가들에 의한 자연권과 자연법을 체계화한 세속적 규정, 곧 사회계약사상에서 출발한다. 17세기에 인권사상은 양도할 수 없고, 국가도 침해할 수 없다는 기본권 사상으로 정립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어 인권사상과 제도로 확립되었다. 근대 자유주의적 인권개념은 역사적으로 두 갈래로 전개되어 발전한다. 하나는 서구의 합헌 주의적 민주정치체제 확립과 정치사회적 인권실행이념으로⁴⁾과 다른 하나는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적 제도화와 발전의 근본이 된다.⁵⁾

실제 인권문제가 국제관계속에 등장한 것은 2차 대전 이후 1948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을 채택하면서부터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사회의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함은 자유와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라고 선언하고 “인권의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모독하는 만행”이라고 규정하여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선언이자, 동시에 국제법적 실체가 된다. 이후 1966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선택의정서가 채택되고, 1976년 발효되어 가맹국에 대한 광범위 한 인권의 인정과 보호할 의무의 이른적 법률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세계 인권협약의 인권옹호의 명제는 근대화과 민주주의의 발전이다. 따라서 매년 인권보고서에 의한 각국의 인권발전을 도모한다. 냉전이후 패권국 미국은 자유주의적 인권이념에 근거하여 타국의 정치적 간섭 또는 전쟁을 통해서라도 기본권이나 민주주의체제가 옹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개발도상국이나 비민주국가 혹은 외교관계에서 인권옹호를 이유로 상대국의 내정간섭을 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의 인권의 보편성은 전 지구적 적용을 담보하지 못했다. 최근에 ‘문화적 특수성’이란 가치에 의해 이슬람 근본주의와 아시아 국가들이 주장하는 아시아적 가치에 도전을 받는다. 아시아와 이슬람 국가들은 보편적 인권개념을 문화와 가치가 다른 국가들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일종의 ‘도덕적 제국주의’에 해당한다고 한다.

본래 아시아적 개념은 서구적 사고의 산물로서 발전해 왔다. 유럽의 타자로서 아시아의 존재는 호머(Homer)의 시대부터 몽테스키외, 마르크스, 베버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과장되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인식되었다. 서구의 열강에 의해 식민지 건설이 가속화 되면서 아시아의 이미지는 더욱 왜곡되어 후진성, 정체성, 관능성, 비문명성 등을

4) 명예혁명(1688): 대헌장(1215): 권리장전(1689): 미국혁명(1776)과 제퍼슨의 「미국독립선언서」: 버지니아권리선언(1776): 프랑스혁명(1789)과 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1793, 1795): 미국의 권리장전(수정헌법10조) 등

5) 대량학살금지협정(1946): UN인권위원회설립(1946): UN의 세계인권선언(1948):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919:사회권협약):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966년:자유권협약): UN여성차별철폐 협약(1979): 아동동인권권리협약(1989), 국제노동협약(1919): 국제이주기구(1951) 등

의미하는 용어로 고착화 되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이광요(Lee Kuan Yew) 와 마하티르(Mahatahir) 양자에 의해 주장된 아시아적 가치론은 정치 권력적 동기를 내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동아시아 국가의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자신감과 서구사회의 도덕적 황폐화 현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결합하여 아시아 부활을 위한 대담한 가설을 시작했다. 이들은 동아시아 국가의 유교적 전통에 주목하여 일련의 덕목을 아시아적 가치의 내용물로 제시하였다. 곧 권위, 질서, 합의를 존중하는 공동체 주의적 전통, 가족의 가치, 강도 높은 노동윤리와 근검절약정신, 교육열 등이다.⁶⁾

인권에 대한 논쟁은 1993년 3월 방콕회의와 6월의 비엔나 세계 인권회의에서 동서양 간 인권문제의 갈등이 첨예화 되고,⁷⁾ 세계은행(World Bank)의 아시아경제의 성공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보고서 “동아시아의 기적(The East Asian Miracle)⁸⁾을 배경으로 1994년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에 실린 싱가포르 전 수상 이광요와 한국의 야당당수 김대중의 논쟁에서 정점을 이룬다. 이는 헌팅턴(Samul P Huntington)이 '제3의 물결(The Third Wave)'에서 제기한 정치적 보편성과 '문명의 충돌'에서 제기한 문화적 특수성들 사이의 긴장이 이미 동서양간에 표출되는 것이다.(Huntington, 1991, 1993)

동서양간의 인권논쟁을 요약해 보면 첫째, 서구적 인권논리의 사상적 배경은 로크(J. Lock)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을 두고, 아시아 논리는 공자의 유교사상에 뿌리를 둔다. 둘째, 서구사상은 개인의 존엄을 중시하는 반면, 아시아적 가치는 집단 및 공동체, 국가를 중시한다. 따라서 서구의 민주주의는 체제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동아시아 권위주의체제의 우월성 시비가 된다. 셋째, 접근방법에서 서구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중시하는 반면, 아시아적 가치는 사회주의 전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보장을 우선시 한다. 넷째, 서구는 인권보장과 정치발전에 역점을 두는 한편, 아시아는 개인인권보다 공동체의 빈곤탈피, 경제발전부분에 초점을 둔다. 이런 논쟁의 정점에서 인권사상의 보편적 수용이라는 서구적 명제와 문화적 특수성에 입각한 동아시아 갈등의 논쟁의 큰 줄기를 형성한다.

6) 싱가포르 정부는 1989년 국민이념으로 4개의 핵심가치를 공표하였다. 그 내용은 사회를 개인보다 우선시하며, 가정을 사회의 초석으로 간주하고, 경쟁대신 합의에 의한 문제해결을 모색하며, 인종적, 종교적 관용과 조화를 추구한다. 1991년 의회법서는 핵심가치대신 공유가치의 표현을 채택하였으며 개인에 대한 존중과 공동체의 지지를 다섯 번째 항목으로 추가하였다.

7) 아시아측은 인권문제는 각국의 특수상황을 고려해야하며 서구적 기준을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내정간섭이나 주권의 침해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주장은 ASEAN국가 대부분의 지지를 받아 중국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데 성공하였다.

8)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동아시아의 경제발전모델이 한국 등 '4마리의 용'을 거쳐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중국 등 이른바 '4마리의 호랑이'로 파급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그 원인은 동아시아의 독특한 경제운영 방식에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학계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World Bank,1993.)

2. 아시아적 가치에서 인권의 내용

아시아적 가치는 인간은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집단의 성원으로로서, 또는 사회적 관계 안에서 삶을 영위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곧 인권의 개념이 지나치게 개인성의 차원에만 치중하여 개인의 권리의 법적 보장에만 관심을 쏟는다면 다른 한축인 사회성이 훼손된다는 것이다.⁹⁾ 이러한 집단과 공동체의 권리를 사회정의의 핵심으로 받아들이고, 강조하는 동아시아의 공동체 권리개념은 개인의 권리보다 공권력의 확고한 토대를 제공하였다. 고도 경제성장을 이룬 동아시아의 자심감은 지속적인 서구의 아시아 인권문제 개입에 반발하면서 동아시아의 고도성장이 서구의 원리인 자유시장,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독특한 사회, 문화적 요소에 근거를 둔다고 주장한다. 아시아의 사회문화적 요소의 중심에 유교적 전통에 바탕을 둔 권위주의와 가부장주의, 공동체주의, 그리고 가족중심주의가 자리를 한다.

유교의 정치사상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세상의 궁극적 가치는 국가와 정부를 통해 실현된다고 생각하며 민주주의 인권사상은 국가불신에서 출발하고, 국가나 정부와 대립된 개인의 인권확산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절대 개인의 존재 없이 정치, 안보, 경제의 문제를 윤리와 도덕에 귀속시키는 유교체제가 인권을 유린한다는 주장은 타당치 않고, 다만 유교전통은 공동체 내에서 지켜야 할 가치와 덕목을 최우선으로 상정하고 추구하므로 절대적인 인권, 공동체보다 우선하는 권리, 신성불가침의 개인영역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¹⁰⁾ 국가는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민을 도덕적으로 계도하는 주체로, 공공의 선을 추구함으로써 가장 궁극적인 가치는 국가와 정부를 통하여 세워진다고 한다. 그리고 유교전통의 정명론은 각자에 맞는 역할과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 각 사람의 권리 또한 정해진다고 한다.¹¹⁾ 한편 차등적 질서 안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정을 기하는 장치로서 권력자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며, 각 사회구성원에게는 권리주장보다 책임수행을 강조 한다. 따라서 유교사회에서는 정의나 공정성은 온정주의적, 시혜적 성격을 띠게 된다. 또한 보살핌의 윤리로서 유교 윤리는 책임의 도덕이다. 책임의 도덕은 사람간의 독립보다는 연결을 강조하고 한 개인보다 인간관계를 우선시 한다. 동일한 신분질서 내의 사람들은 동일한 도덕적 이상과 규범을 따르고 그 모델을 따라 자신을 수련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이들의 집단에

9) 미국사회의 가족의 파괴, 마약범죄의, 공동체의 해체현상 등은 개인의 인권만 강조하고 공동체 가치를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한상진, 1994, p.14 : 손문의 「시멘트 이론」은 “장차 외국의 압제에 저항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유를 부수어 그 모래에 시멘트를 부어넣어 굳은 반석을 만드는 것처럼 강력한 단체를 결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10) 함재봉, “유교의 전통과 인권사상”, 계간 「사상」 겨울호 1996, p117-118.

11) 곧 군주의 예와 신하의 예가 다르고, 남자의 도덕과 여자의 도덕이 다르며, 부자의 예가 다르다

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책임은 있지만 권리는 없다.¹²⁾ 그리고 남녀유별이라는 이분화 된 역할을 상징하고, 남성과 여성의 의무와 권리의 한계를 등으로서 평등권이 개인 인격체로 갖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여성의 권리와 의무는 지위의 변동과 함께 이동한다.¹³⁾ 서구적 가치를 거부하는 것은 곧 서구적 성별 간 역할개념에 대한 거부감도 포함한다. 즉 개인주의의 정치적 반발을 자유방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의 반발을 자유방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포함한다. 가족구조는 교육, 경제적 성취, 공공안전, 범죄예방과 건강관리에 대한 정부투자 등등의 사안과 관련되기 때문에, 아시아 사회들은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선택적 적용을 통해서 핵가족의 응집력을 유지시키고, 서방이 경험한 사회분열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교전통의 가족주의는 부모와 자식, 형제간의 위계적 상하관계를 기초로 하여 가장의 권위는 절대적이며, 자식이 부모에게, 아우가 형에게 어떠한 권위의 도전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계층적 체계인 가족관계는 그대로 사회조직으로 확대되고, 국가는 그 위계질서의 연장이 된다. 이러한 위계질서에서 덕치의 이념은 발전노력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며,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잠시 시민, 정치적 권리의 희생을 담보할 수도 있다고 한다. 유교가 인권유린을 조장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계층적 구별과 신분제, 남녀차별의 전근대적 요소를 함축하는 것은 사실이며, 최고 권력자와 지배계층의 도덕적 교화와 자기 수양을 통한 인격 주의적 정치이념의 한계는 극명하다.

아시아적 가치론의 평가차원에서 아시아적 가치는 정치와 경제, 즉 아시아 민주주의와 동아시아 경제발전모델을 정당화 한다. 이에 따르면 첫째, 아시아적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분적으로 제한하지만 공동체의 번영을 담보하는 좋은 정부를 지향한다.¹⁴⁾ 둘째,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은 정치적 안정, 효과적인 정부의 역할, 특유의 노동윤리등 유교적 자본주의에 힘입은바가 크다¹⁵⁾고 주장한다.

아시아가치론은 자국의 전통을 옹호하려는 당위론의 형태로 모색되어 인권담론의 지평이 축소되고, 생산적 논의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다음에서 이와 같은 아시아적 가치가 여성, 특히 결혼이주자에 관련된 정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12) 이승환, 「유가사상의 철학적 재조명」,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p203-31.

13) 딸, 어머니, 아내, 할머니로서의 역할과 지위가 다르고, 성공하거나 지위가 높은 남편과 결혼한 여성, 지위가 없고 가난한 남편과 결혼한 여성의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의무와 권리도 다르다.

14) 찬헝치(Chang Heng Chee)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그 자체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좋은 사회의 실현에 있다. 그녀는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강조, 권위의 존중, 융합적 정단의 존재, 경제발전을 담당하는 중앙집권적 관료정치에 네 가지를 들어 아시아적 민주주의의 특징으로 열거한다. p. 21-24

15) 그러나 유교자본주의론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유교가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자본주의경제학과 친화성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유교는 자본주의의 추동요인이 아닌 제약요인이 된다고 한다는 것이다.

Ⅲ. 한국의 여성결혼이주자 정책과 아시아적 가치

1. 한국의 여성결혼이주자 정책

지난 10년 동안 이주와 관련하여 두드러진 현상은 전 세계의 이주자의 절반이 여성이며 아시아에서 여성의 이주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국제이주기구(IMO)의 「2003년 세계이주보고서(World Migration Report 2003)」에 의하면 2000년 현재 국제이주는 1억7천5백만 명(약2.9%)로 전 세계 인구 35명중 1명이 국제이주자이다. 여성이주자 비율은 1960년도에 전체이주자의 48.5%를 차지하고 2000년도에는 52.4%로 나타나고 있다.¹⁶⁾

여성의 결혼이민이 확대되는 것을 여성주의적 시각들은 세계화의 시장관계 속에서 전 지구적 자본팽창이 기존의 가부장적, 인종차별적 관행들을 기반으로 한층 더 젠더화 되고 인종, 지역차별을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기존의 젠더 불평등을 강화하고 심화시킨다고 한다. 특히 부의 재분배는 국가 간 부의부 빈익빈의 현상을 극화시키고 빈곤의 여성화로 이어진다고 한다.¹⁷⁾ 결국 세계화의 과정에서 악화되고 있는 '빈곤의 여성화'로 고향을 떠나 국경을 넘는 초국가적 현상이 발생한다. 특히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는 개인의 선택문제로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동한다. 첫째,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국가 간 불균등 발전과 성의 상품화. 둘째, 가난과 실업이 만연한 송출국이 여성송출을 장려 또는 방관하는 정책과 가부장제 문화. 셋째, 신부부족 해결을 외국여성으로 충원하려는 유입국의 정책. 넷째, 영리추구의 국제결혼중개업체 등이 국제결혼이주의 증가원인이다. 최근 5년 이내의 국제이주는 절반이상이 아시아에서 일어나며, 특히 여성의 이주가 아시아이주의 65%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많은 여성이주자들은 비합법적 이주가 주류를 이루며 젠더와 관련한 특수형태의 차별과 인권침해의 특징을 드러낸다. 여성의 이주는 경제적 빈곤과 연관되어 있고, 또한 여성이주의 증가는 인신매매와 같은 국제범죄의 성장과 연관된다. 그리고 이주과정과 이주목적국가에서 이주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심각하게 난다.

수천 년간 단일민족의 신화를 간직해 온 한국 사회에서도 결혼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유입이 증가하는 배경에 국외적, 국내적요소가 같이 작용한다. 국외적 조건으로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세계화에 의한 개발의 양극화로 저개발국 여성들은 자

16) IMO(2003). World Migration Report 2003. IMO. Geneva. P5

17) Nancy A. Naples. "Changing the Terms: Community Activism, Globalization, and the Dilemmas of Transnational Feminist Praxis". Nancy A Naples and Minish Desai. eds. *Women's Activism and Globalization : Linking Local Struggles and Transnational Politics*. New York: Routledge. 2002. P. 8-17

신과 가족의 나은 삶을 위하여 부유한 국가로 끈임 없이 이동하려는 의지를 갖고, 시도를 하는데, 이때 여성들은 해외취업과 이주노동이 보다는 상대적으로 최소비용이 드는 국제결혼이민을 택한다. 또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송출은 저개발국의 중요한 외화획득의 원천이 되고 국가개발에 사용되기 때문에 송출 국 정부는 해외취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자국여성들의 국제결혼이주를 방관한다. 이러한 저개발국가의 자국인력 해외송출에 우호적인 정책은 비합법적인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국내적 배경요소에는 유가전통인 남아선호사상, 가부장적 사고, 저 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국내의 경제 인력의 감소, 경제제일주의, 정부의 우호적 지지 등의 요인들이 작동한다. 한국사회의 오랜 전통인 남아선호사상은 남녀성비불균형의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¹⁸⁾ 또한, 고학력화 추세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증대로 인한 혼인연령의 상승과 만혼화, 독신자 증가, 저소득 남성이나 농촌총각과의 결혼기피 현상을 유도했고, 국내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남성들의 국제결혼 수요가 늘고, 저개발국의 여성과의 결혼으로 독신을 면하려는 대안적 통로가 한국인의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한편 저 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국내의 인구와 노동력 보완을 위한 국가 정책으로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사회복지 관련법 등 결혼이민자들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여 국경을 개방했다. 각국의 국제결혼이주, 해외노동송출 등은 거의 중개업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들 국내의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은 고소득을 위해 아시아 각국현지의 결혼중개업자들과 연계하여 각국의 정부의 합법적인 절차를 피해 영리를 목적으로 서류위조, 비 인륜, 탈법적 사업팽창, 뇌물과 관료들과의 유착 등, 탈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무리한 사업실적을 올리려고 한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유입이 급증하고, 유입과정과 정착과정에서 많은 인권 침해적 요소들이 속출한다.

1990-2005년 여성결혼이민자 숫자는 159,942명으로 매년 급증하여 2005년 한해의 국제결혼은 43,121명(총 316,375건의 13%)으로 국민 8.4쌍 중 1건이 국제결혼을 하였다. 이중 한국남성-외국여성과의 결혼은 전체 국제결혼의 72%인 31,180건이다.

중개업을 통한 국제결혼은 모집과정¹⁹⁾ 그리고 중개절차상에서 매우 인권 침해적, 비인륜적 문제들이 있고, 과도한 수수료와 지불비용에 비해 부실한 서비스 제공 한다²⁰⁾

18) 남녀성비는 1990년대 이후 여아 100명당 남아가 116.5명, 2010년엔 남성 5명중 1명은 여성배우자를 구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여성개발원, 2005 연구보고서 p.15; 2005 여성통계연보 p49-52

19) 인터넷 홈페이지, 벽보·플래카드, 생활정보지 광고, 신문광고 등을 통해 '신부보증제', '초혼, 재혼, 장애인,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 '만남에서 결혼까지 7일',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순종과 복종을 잘한다', '가냘픈 몸매와 하체가 길고 날씬하다',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가능" 등 여성 비하적, 인권 침해적인 광고문 게재

그러나 중개과정에서 현지 행정·사법당국의 감독은 미흡하고, 공식적 규제방침을 밝히지만 여성결혼이민자 송출을 외화획득 수단으로 간주하여 장려하는 모순적 상황을 연출한다. 그러나 상업적 결혼중개업체와 그를 통해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이 현지 정부의 단속에 걸릴 위험성이 있고, 국가위상은 추락하게 된다.

한국으로 유입된 여성국제결혼이주자들은 대부분 언어소통 문제, 생활전반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불편을 겪거나 가정이 파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각종 정보, 자원, 취업으로부터도 소외되며²¹⁾ 극심한 경제적인 빈곤을 겪는다.²²⁾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은 부모의 낮은 경제·사회적 지위, 언어·문화·교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가정과 학교교육에서 문제가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돈을 매개로 상업화 된 결혼으로 시댁과 친지의 비우호적 환경, 남편의 정서적 불안정 등 이유로 가정폭력과 불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²³⁾ 그러나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사람은 10%정도로 낮고, 이들 중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해본 적(34%)이 있지만 이혼을 못하는 이유는 자녀문제, 체류자격 유지문제라고 한다. 2005년 외국인 처와의 이혼은 2,444건으로 2004년보다 51.7%가 증가했다. 이혼과 더불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신분의 불안정성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이와 더불어 그들의 가장 힘든 고통은 사회적 편견이다. 한국은 다문화주의 전통이 없고, 순혈주의 중시 풍토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한다.

한국 정부는 결혼이주자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복지부 주관으로 2004년12월-2005년 6월까지 전국적 실태파악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하였고, 2005년 '외국인 이주여성', 자녀의 인권실태 파악 및 차별개선 추진을 대통령 지시과제로 관리할 것을 지시하였다(05.5.22). 이에 따라 체류불안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1차 지원 대책('05.8)'²⁴⁾과 생활상의 지원에 중점을 둔 '2차 지원 대책('05.11)'²⁵⁾을 마련하여 시행

- 20) 위계화 된 하청구조 하에서 남성이 한 시간 이내에 적게는 20-30명, 많게는 200-300명의 여성 중 한 명을 선택하는 맞선 절차와 강요된 '성적결합'(합방)을 통한 결혼강요와, 850-1,200만원 비용지급자인 남성의 관점에서 여성에게 제공되는 정보도 빈약하고, 허위 또는 부정확하고, 일방적이다.
- 21) 여성결혼이민자 50%이상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를 모르고, 건강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86% 이상이 사회복지 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며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 22) 전체 여성결혼이민자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52.9%,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13.7%에 불과. 이들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는 57.5%이고, 경제적 이유 때문에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는 경우도 15.5%이다.
- 23) 알코올 중독, 이상성행위자, 습관적 폭력 등 결혼불능 남성들이 국제결혼시장에 유입으로, 결혼생활유지를 위해 외국인 배우자를 철저히 통제하고, 성적학대가 심각한 수준이다.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은 남편과의 성격차이(33.4%), 생활방식의차이(22%), 경제문제(12%), 음주(11%) 순이다. 특히 부부폭력인 경우 언어폭력(31%), 신체폭력(10-14%)이며 별거나 이혼 중인 여성들의 부부폭력의 경험이 높은 편인데 언어폭력(70-80%), 신체폭력(50%), 성행위 강요(40%)이다
- 24) 안정적 체류지원, 생활정보 제공, 언어 및 문화이해 교육, 가족관계 증진 및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기초생활 보장 및 훈련, 일자리 연계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
- 25)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이 우리 사회에 통합되도록 생활상의 시급한 문제를 해소에 중점.. 해당 가족의 사

하였다. 이어 2006년3월 차별시정위원회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의, 전문가 간담회와 베트남·필리핀현지실태 조사를 거쳐 결혼과정상의 문제, 추진체계, 정책관계자 교육방안 등 3차 종합지원 대책인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2006년 4월26일에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1)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2)가정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 3)한국 사회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 4)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5)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6)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7)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및 중앙, 지방정부간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 7개안 28개 항목을 발표하였다.²⁶⁾ 정책은 기본적으로 유교적 공동체주의, 혈통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주의, 은정적 권위주의, 경제발전과 국익우선주의의의 이념에 기반 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2. 여성결혼이주자 정책에서 나타나는 아시아적 가치

세계화 시대에 당면하는 몇 개의 인권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여성의 국제이주 문제를 개인주의적 가치와 공동체 주의적 가치에서 살펴 볼 때, 가장 아시아에서 민주화와 인권옹호가 어느 나라보다 우선 실행되어온 한국의 인권문제는 외형적으로는 보편적 자유주의의 인권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회내부 깊이 아시아적 가치를 대표하는 개념들(가족중심, 가부장제, 공동체주의, 경제발전, 국가이익)이 자리를 한다. 한 국가의 정책은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발전개념과 인권개념 반영의 산물이다. 곧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존인식에 근거하여 그 사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정책을 수립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성결혼 이주자 정책에서 나타나는 아시아적 가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동체 우선주의

2006년4월 정부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의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동체 주의적 접근시각의 문제가 드러난다. 정부는 추진배경에서 "이들의 문제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됨은 물론, 국가의 대외이미지 실추와 함께 향후 외국여성의 출신국과의 마찰이 유발될 수 있음"이라고 한다. 저출산·고령화와 부족한 노동력확보의 대책의 일환으로 국제결혼을 보고, 국제결혼에서

회적용 지원체계 구축, 자녀양육 지원 등 방안 마련.

2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 교육인적자원부·외교통상부·법부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중앙인사위원회·기획예산처·대통령자문본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

나타나는 이주자와 혼혈인들의 차별과 인권침해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면 국제사회에서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자초할 것이고, 사회불안요인²⁷⁾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 기초한다. 인구와 노동력 감소를 저개발국 결혼이민여성들을 받아들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사회통합을 통해 사회불안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발상은 한국사회의 불안요소를 외국결혼이민자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안점이 정책의 제목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이 아닌 한국사회의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다. 곧 국내의 결혼하지 못한 한국의 남성들과 그 가족을 위한 정책이다.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해결로 노동인력 흡수란 의미에서 국가공동체를 위함이고, 아내, 가족의 대를 이어줄 아이를 낳아줄 산모를 구한다는 의미에서 가족공동체의 이익을 위함이다. 따라서 가족과 국가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한 개인(외국여성)의 인권은 잠시 희생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접근한 정책인 것이다.

둘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정부의 기본입장은 인권침해 및 매매혼적인 성격은 인식하지만 한국 내 남성의 결혼수요자를 위해 불가피한 현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인권 침해적 결혼과정의 개입과 개선의 모색보다 결혼이민여성의 정착과 통합에 초점을 둔다. 또한 인권침해가 결혼의 정착단계가 아니라 국제결혼 성립단계에서부터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 비인간적인 인구유입을 그대로 방치한다. 정부정책안의 28개 부처별 방안 중 '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의 단 7개안만 이주여성의 입국 또는 입국 전 과정에 대하여 다루며, 그나마 7개안 중 5개안은 구체적 정책수립의 과정이 아닌 정책검토, 추진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국 간 구체적 협력체계 구축이 아닌 외교의제로 올리거나, 한국의 정보를 제공을 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에 그친다. 정부는 결혼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법률을 2007년까지 제정하겠다고 했지만, 관리법만 있고 처벌법이 없어 실효성도 의심스럽다.²⁸⁾ 뿐만 아니라 이주여성 보호를 위한 방안인 "사증발급 시 인터뷰" 제도가 사기, 위장결혼을 막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결혼의 진정성의 문제이다. 현재 결혼비자발급의 정부정책은 인터뷰를 통한 여성의 결혼의 진정성의 확인, 즉 위장결혼 여부확인 및 전염병 유입규제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룬다. 다른 한쪽인 남성의 결혼진정성 및 결혼생활의 영위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여성에게만 비자심의를 하고 한국 남성의 자율성 및 결혼유지를 담보하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성립조건 등의 심의를 다루는 법적근거가 없고, 심의를 하지 않는다.²⁹⁾ 또한 결혼예정 외국인 여성에게만 한국의 정착과 통합관련 교육을

27) 인종차별에 의한 프랑스 폭동(2005), 호주 폭동(2005), LA 폭동(1992), 벨기에 방화사건(2005) 등

28) 소라미, 「정부의 '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를 위한 정책 검토」, 「정부의 결혼이민자정책 : 다시보기」, 토론회자료집, 국제 이주기구서울사무소, 2006

실시하며, 한국남성에게는 국제결혼의 예상되는 문화차이, 갈등요소 등에 대한 교육이 없이 외국여성을 한국에 필요한 물건을 수입하는 정도에 그친다. 다시 말하면 여성결혼이주자에게 한국사회의 문화나 전통적 규율에 순응할 것만 요구하고, 국제결혼을 통한 한국의 가정의 모든 문제는 가족공동체의 가장의 책임 하에 둔다는 것이다.

넷째, 한국의 문화와 가치의 우월성 때문에 타문화를 배제하는 기본적 성향에 기인하여 문제의 본질을 다문화 사회의 부재로 파악하지만, 다문화 사회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배제한다.³⁰⁾ 다문화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등의 구상은 있지만 정작 다문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사회가 추구해야 열린 다문화 사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문화주의 수용의지 등의 알맹이가 빠져있다. 인권에 기초하지 않는 다문화주의를 수용할 경우 오히려 획일성의 폐해를 수반함으로써 막연한 다문화에 대한 언급이 아닌 입장이 정리된 다문화 정책이 제시가 있어야 한다. 어머니의 모국어를 금기시하는 분위기는 아이들의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하며, 성장발달에 심한 지장을 준다.

다섯째, 결혼이민자가 일방적으로 동화, 통합되는 경로만 상정할 뿐 한국이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의 개체로서 국적을 유지하며 살수 없도록 한다. 영주권 취득이 국적 취득보다 쉬워야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영주권 취득이 국적취득보다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국제결혼의 경우 간이귀화요건으로 국내에 2년간의 거주요건을 규정하지만 '출입국관리법은 연수권(F-5)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선 5년간 거주해야 한다. 또한 영주권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주민자격'이 단순히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권리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면 그에 상응하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과 결혼하면 취업이 가능한 거주(F-2)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이혼신청인 경우 방문동거비자(F-1)로 전환되는데 이때 이혼소송중의 결혼이민자의 법적권리가 미흡하여, 체류불안을 느끼게 된다.³¹⁾ 다시 말하면 한국사회의 혈통적 가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면 한국에 거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³²⁾

29)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결혼이주자뿐만 아니라 이주자를 초청하는 자국민의 자격에 대하여 이민법에 근거한 심사 한다. 초청자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규정,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는 결혼이주자를 초청불가. 결혼경위서, 서약서 제출, 가정폭력 전과기록통보, 10년 내에 3번 이상 여성을 초청하거나, 2년 안에 새로운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결혼파탄의 원인이 자국민에게 있는 경우가 많다는 해석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30) 설동훈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 총서 14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473-478

31) 일본은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혼인신고를 하면 '일본인의 배우자로서' 체류자격 취득, 결혼 후 3년이 경과하면 간이귀화를 통해 일본국적 취득한다.

32) 예를 들면 18세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외국인 모에게 기초생활보장, 이혼수속중인 미성년의 아동을 두고 있는 외국인모에게 이혼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 한국의 체류허가를 인정하는 것 등. 그러나 이혼수속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2) 혈통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주의

이 대책은 인간의 존엄, 인권의 차원이 아닌 정착과 사회통합을 통한 혈통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유지가 핵심이다. 한국에서의 국제결혼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일제하 그리고, 6.25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국제결혼과 그 피해자가 있어왔다. 주한미군과 결혼한 한국여성과 혼혈인 자녀들을 기지촌여성으로, 혼혈아로 소외된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았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과 자녀는 당연히 한국인이란 가부장적 사고가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정책을 세운 것이다. 한국인으로 한국역사와 함께 고통 받은 여성들, 곧 외국남성과 결혼한 한국여성은 제외되었다. 또한 이런 시각에서의 지원 대책은 인신매매 성 국제결혼의 인권침해는 간과하고 여성결혼 이주자에게 며느리, 아내, 자녀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이다. 따라서 지원은 자녀가 있는 이주여성으로 제한되고 있고, 향후 2007년부터 한국국적의 미성년 자녀양육 외국인배우자를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에 포함하겠다고 하여, 결국 여성결혼이민자의 역할은 한국에 와서 자녀를 낳아주는 것으로 자리매김한다. 또한 그 대상이 여성결혼이민자로 한국여성과 남성결혼이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권보호도 여성이민자만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한국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의 가족은 물론, 이주남성의 인권보호가 제외되었다.³³⁾

둘째, 유교전통 안에서 정명론은 아름에 걸 맞는 역할과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 그 사람의 권리 또한 정해지게 된다. 기본 개념가운데 하나인 예의 본질은 상하, 존비의 등급관계를 구별하는데 있다 여기서 위계적으로 등급화 된 사회가 가장 정의로운 사회이며, 귀천, 존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그에 따라 자신의 직분과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공평함으로 이해된다. 예의 질서는 신분질서, 위계적 가부장제질서를 강화하고 성, 연령, 신분적 위계구조는 충, 효, 부덕 또는 장유유서라는 도덕적 선으로 이해된다. 유교적 가부장제는 성별역압이나 연령별 체계를 은폐시키는 장치가 내재되어 있다고 한다.³⁴⁾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소외된 농촌총각, 결혼시장에서 밀려난 미혼남성, 이혼 남성, 고령남성 등 주변부 남성에게 팔려온 아내로서 매우 낮은 지위를 가지며, 효와 부덕을 실천해야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고,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신분이다. 그러나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 정책은

33) 실제, 이들 가정은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법률적인 제제도 더욱 가혹하며, 가부장적 편견 속에서 취업문제와 관련, 경제적 어려움에도 직면한다.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서 국적여부와 상관없이 여성결혼이민자에게는 자녀 접견권을 보장 하고 국내정착을 지원하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남성결혼이민자에게는 별도의 접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34) 김은실(2003), 「신자유주의와 유교적 가부장제」, 조순경 외, 「한국의 근대성과 가부장제의 변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147-148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의 인간적인 삶,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사회에 만연한 가부장적 문화해소에 집중하기보다 유교적 질서를 강화하는 임시적, 시혜적, 은정적 정책을 세웠다는 것이다.

셋째, 유교적 질서에서 신분적 멸시와 억압은 당연한 것이다. 편견은 그 사회의 인습과 문화적인 배경에서 비롯되는데 단일민족의 의식과 가부장적인 편견, 공동체 중심문화의 왜곡에 기인하여 결혼이민자의 국내적응에 고통을 외면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은 여성결혼이민자를 가족과 한국 사회에 통합해야 할 대상으로 한정시키다보니 보호받고 교육받고 복지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명시할 뿐, 여성결혼이민자를 주체적인 존재로서 이민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갖는 세력화(Empowering)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 여성들이 문제제기하는 전형적 가족 이데올로기의 희생자로서 결코 중심이 아닌 주변부에 있는 존재가 된다.³⁵⁾

셋째, 한국의 결혼이민자 상당수가 인종별, 성별, 경제적, 그리고 언어소통의 한계성 때문에 다중의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약자이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합법적 체류허가에 대한 요구가 인도주의적 차원의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요구라는 인식이 없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 입증에 따른 어려움³⁶⁾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허락받더라도 한국 내에 장기적인 안정적 체류가 허락되지 않고, 친권은 당연히 한국남성에게 주어진다. 결혼 양측에 의해 생산된 자녀에게 친권만 인정하는 것은 엄연한 혈통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주의이다.

넷째, 국적조항에 의해 수급이 제한되는 결혼이민자가족에게 최소한의 생활유지와 직업훈련, 일자리 제공, 보건, 의료, 보장체계를 지원방안과 접근성을 완화하는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와 전달체계가 없고 단지 국적취득 전이라도 한국국적의 미성년 자녀양육 외국인배우자를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에 포함하겠다고 하여 한국국적인에 대한 보호만 강조하고 여설결혼 이민자의 자녀는 배제된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 취업알선, 보건건강 부분의 서비스보다 이민자가족을 보호하는 서비스로 결국 여성결혼이민자의 역할은 한국에 와서 자녀를 낳아주는 역할로 자리매김한다.

35) 독일은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전략 세웠고, 호주는 다양한 문화 포용을 위해 정부에 '이민 및 다문화부'를 설치하며, 마을의 경찰서에서는 '소수민족연락관'을 고용하고 있다. 설동훈 외(2005), 「이민정책에 관한 연구」,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P 48-53

36) 이혼사유로 상정하는 가정폭력, 남편의 정신적, 육체적 질환,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필박에 대한 배우자의 배책사유에 대한 증거나 증명이 어렵고 가족공동체나 지역공동체에 의해 밀폐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염, 「정부의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정책방향에 대한 고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원원 전략은 가능한가?」, 「정부의 결혼이민자 정책 다시보기」 토론회자료집, 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 2006

3) 온정적 권위주의

한국의 결혼이민정책은 결혼과정과 정착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적 요소를 배제한 채 유교전통에 따라 결혼이민여성을 이분화 된 지위로 구별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존재로 자리매김 한다. 따라서 정책의 제목도 '국제결혼이민자 정책'이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이란 점이다.

첫째, 유교전통에서 차등적 질서내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하는 장치로서 권력행사 자들에게 높은 도덕적 능력을 요구하는 덕치는 온정적 권위주의 (soft authoritarianism)³⁷⁾ 의 성격을 갖게 한다. 선한 정부란 자국민의 의식주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정부를 말하는데, 정치발전은 백성을 위한 추상적 구호아래 계속된다. 사회기강을 바로세우고, 국민을 계도하는 주체로서 공공선을 추구함으로써, 궁극적 가치는 국가와 정부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온정적 권위주의는 고도로 엘리트 중심적인 유교정치문화에 의한다. 여성결혼이주자 정책은 그동안 방치되었던 것을 노무현 대통령의 온정적 지시에 따라 소수의 엘리트에 수립되고 진행되었다. 또한 유교적 관계질서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사회적 성공을 막는 남성들 사이에 굳건히 짜여있는 그물망을 존재하게 한다. 여성결혼이주자 정책결정과정은 다수의 여성의 참여는 물론 결혼이민자의 참여와 목소리를 배제함으로써 세워진 정책이다. 남성들이 서구적 가치를 거부하는 것은 곧 서구적 성별 간 역할개념에 대한 거부감을 의미한다. 곧 개인주의의 정치적 반발을 자유방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가정 내에서의 반발을 자유방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포함한다. 가족구조는 교육, 경제적 성취, 공공안전, 범죄예방과 건강관리에 대한 정부투자 등의 사안과 관련되기 때문에 여성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7개의 안중 6개안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나 자아실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아시아적 가치의 선택적 적용을 통해서 핵가족의 응집력을 유지시키고, 서방이 경험했던 사회분열을 피할 수 있다는 사고로 접근한다. 외국의 인력을 흡인하고 한국이란 공동체에 조화로운 삶의 정착과 통합에만 초점을 둔 임시방편의 대책인 셈이다.

둘째, 여성결혼이주자에게 의무와 권리의 한계를 뚫고서 자녀를 낳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수행을 잘하도록 하는 온정적 시혜정책이다. 보살핌의 윤리로서 유교윤리는 책임도덕이다. 책임의 도덕은 사람의 독립보다는 연결을 강조하고 개인보다 인간관계를 우선시 한다. 개인적 책임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책임으로 확대될 수

37) '온정적 권위주의 (soft authoritarianism)'에 대한 논의는 Meredith Woo Cumings, "The New Authoritarianism in East Asia," Current History, Vol. 93, No 587(1994) : Young-Myung Kim, "Asian Style Democracy : A Critique from East Asia," Asian Survey, Vol. 37, No.12(1997)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음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신분질서 내의 사람들은 동일한 도덕적 이상과 규범을 따르고 동일한 도덕적 이상인간의 모델을 따라 자신을 수련하도록 요구한다. 문제는 여성결혼이주자를 동일집단으로 간주하고 동일한 도덕적 이상과 규범을 따르게 하고, 동일한 온정적 시혜를 베푸는 것이다. 동일한 여성결혼이주일지라도 이주배경과 이주과정, 정착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의 종류, 처지와 형편, 개인의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집단으로서 간주하여 온정적 권위에 의해 일괄적으로 시혜를 베풀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강조한다. '여성결혼이주자의 사회통합지원 대책' 그 어디에도 개인의 개별적인 복지나 자아실현의 추진조항은 없다. 또한 한국사회의 동일집단의 친밀성 때문에 소외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일괄적인 책임과 의무는 있지만 권리는 없게 된다. 왜냐하면 동질의 집단들 간의 폐쇄성은 관련된 집단의 구성원에게만 관심을 갖게 하여 더욱 여성결혼이주자들을 소외시킨다. 이러한 고려 없는 정책접근은 사회와 이웃, 가족으로부터 이주여성들의 인권침해를 더 가중시킬 뿐이다.³⁸⁾

셋째, 아시아적 가치는 가족, 사회, 국가로의 계층적 위계질서의 연장으로 행해진다. 쌍무적 관계가 아닌 위계적 관계에서 보살핌의 윤리의 책임도덕을 강조한다. 따라서 제7안의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한국의 여성결혼이주자 정책은 종합적으로 각 부처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가족, 지역,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총체적인 명령하달식의 정책 전개를 한다. 정부예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없애서 결혼이민자의 환경과 처지에 맞는 다양한 인권옹호의 자율적 노력들을 폐쇄시킨다. 또한 덕치이념의 발전노력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며, 체계적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단기간 시민, 정치적 권리의 희생을 담보할 수도 있다는 사고의 각 부처별 시행계획들은 여성결혼이주자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약간의 희생도 감수해야한다고 하고 있다. ³⁹⁾ 아시아적 가치가 인권유린을 조장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계층적 구별과 신분제, 남녀차별의 전근대적 요소를 함축하는 것은 사실이며, 최고 권력자와 지배계층의 도덕적 교화와 자기 수양을 통한 인격 주의적 정치이념의 한계는 극명하다.

4) 경제발전과 국가이익의 강조

현 정부는 긴 민주화 과정을 통해 정착된 된 정부라고 하지만 여전히 국익과 경제발전이 우선순위를 갖는다. 2006년4월 정부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

38) 김혜숙 (1998), "여자, 그 분열된 존재", 고려대학교부설 철학연구소 창립2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문: 김혜숙(1998), "아시아적 가치와 여성주의: 책임의 도덕성과 권리의 정치학" 철학연구회 '98년도 추계 발표회 발표문 참조

39) 정권의 도덕성을 내세우기 위한 과도한 세금부담,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과도하고 집중적 예산집행, 정책진행과정의 무리한 요구들 다시 말하면 각 부처별 정책평가제, 다문화교육 학교평가, 복지사와 교사들의 임용 가산제, 잘못하면 조작될 수 있는 언론과 방송의 대규모 홍보전략 등 허위 이데올로기화

책)의 검토배경을 살펴보면 몇 가지 경제발전과 국가이익 우선주의를 발견한다. 우선 지적되어야 할 것이 이 지원 대책이 대통령자문회의인 '저 출산과 고령화시대를 위한 미래위원회'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수립된 정책으로 저 출산, 고령화시대의 대책 일환으로 국제결혼을 보며, 국제결혼에서 나타나는 이주자와 혼혈인들의 차별과 인권침해 현상을 그대로 방치하면 국제사회에서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자초할 것이고,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 기초한다. 고령화, 저 출산, 국내노동인구의 감소, 결혼시장의 혼란 등의 이유로 국제사회에 대한 개방과 여성결혼이주의 장려에서 비롯된 "여성 국제결혼 이주자 정책"은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인구를 증가시키며, 결혼욕구를 가지나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는 한국남성의 문제해결을 목표로한다. 이 때문에 자국민의 아닌 외국인의 입국과정에서 인신매매와 같은 결혼중개업의 비 인륜적 인권침해를 묵고하고, 유입되는 외국인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자국민의 이익을 충족시키며,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결혼이주자 정책은 국가의 경쟁력 추구를 위해 외국여성들의 입국과정과 한국 사회의 정착과정의 인권 침해적 요소들을 배제한 채, 국력통합에만 초점을 맞춘다. 외국인의 한국사회로의 유입과 정착을 통한 실질적인 이득은 차세대 인구확대와 노동력 확보이다. 이주민의 정체성과 이주과정을 고려한 인권을 옹호함으로써 더 신속한 한국의 사회통합이라는 것을 간과 한다.

둘째, <여성결혼이주자 사회통합지원 정책>의 기저에는 비교적 저비용으로 소외된 한국남성들이 결혼이주자의 유입과 사회통합을 통해 값싼 노동력의 확보와 차세대 노동인력 확보라는 의미가 깔려 있다. 결혼이주여성을 통해 가사, 육아, 노인부양 등을 담당하게 하여 사회경제를 책임진 가장들의 생활에 안정을 주고 국가발전을 위한 역군으로서 온전히 경제활동에 충실함으로써 노동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기대한다.⁴⁰⁾ 또한 합법적 국제결혼이주여성들에 의해 비교적 적은 임금에 한국국민이 기피하는 3D직종에 인력충원을 기대하고, 값싼 노동인력확보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를 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주하는 고학력 여성국제결혼이주자의(특히 필리핀 같은 영어권 이주자) 유입을 통해 차세대 자녀들의 외국어 향상과 더불어 값싼 노동인력의 외국어 교육현장 투입을 기대한다.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에 기반 한 가부장적 기반에서 농촌총각과의 기피에 외국여성들을 동원하는 것은 국민국가 내의 결혼시장에서 드러나는 남성의 사회경제적 계급문제를 국제적 성별문제로 전환시키는 계기라고 볼 수 있다.⁴¹⁾ 한편으로는 한국적 상황에서 한국인의 출산장려정책과 남녀평등,

40) IMF이후 불투명한 경제발전의 전망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60년대의 가족적 공동체 환상을 풀어 넣어 근로자의 충성을 이끈 것을 기억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종된 주인의식 회복과 무력감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통합 노력으로 이해된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유리천장의 제거,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거버넌스 추진 없이 단편적인 국가경쟁력을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N. 결론

이상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되고, 경제개발이 앞선 한국의 '여성 국제결혼 이주자 통합지원 정책'에서 발견되는 아시아의 가치를 살펴보았다.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성과 이주라는 특수성을 유교전통의 아시아적 가치와 접목시킬 때 상상할 수 없는 인권의 침해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측면에서 세계화와 이주와 관련하여 받게 되는 최대의 피해 적 가치는 유교적 혈통중심의 가부장적 가치이며, 공동체주의 이념과 책임의 도덕과 권리의 정치이다. 따라서 문화중심주의의 아시아적 가치의 한계는 분명히 드러난다. 이데올로기나 도덕주의에 의존하는 사회통합은 유지되기도 어렵지만 타당성도 의심스럽다. 인권담론은 기본적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정의론과 접목됨으로서 보편주의 대 특수주의, 권리중심 대 의무중심의 상투적 대립을 넘어선다. 인권의 이론과 설명의 역사는 길고 다양하지만 결국 인권은 인간이기에 누릴 자격이 있는 고유한 권한이다.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누구나 진정으로 원하는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전제된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집단의 성원으로로서, 사회적 관계 안에서 삶을 영위한다는 점이다. 개인성과 사회성은 인간의 삶에 불가결하고 환원불가능한 요소이다. 개인이 공동체의 규범, 윤리, 정서적 연대와 공감대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또한 개인이 없는 조직의 집단주의는 생각할 수 없다. 인간의 삶이 불가피하게 개인성과 사회성을 갖는다면 이를 조화시키는 인권의 개념은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인권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법제화하고 제도화 할 것인가, 어떤 수단으로 이것을 집행하며, 그 효과는 어떻게 배분 되는가 등의 문제는 중요하다. 특히 세계화 시대에 인간의 동등한 대우가 사회적 약자에겐 그림의 떡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 시대에서 이주하는 이들을 절차적 보편주의에 따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인권을 실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지녀온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구현하고 그들 나름 데로 공동체집단을 꾸려갈 권리를 누려야 할 것인가는 고민되어야 하겠다. 특히 여성인 경우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받되 여성으로 누려

41) 김은실 (2004). "지구화 시대의 성매매 이주여성, 국민국가 그리고 시민권." 최협, 유명기의,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p358-359

야할 '차이'로서 권리를 발전시켜야 하는가이다. 테일러는 “동등한 존엄성의 정치에서 차이를 무시하는 원칙을 가진 중립성이란 사실 자체가 해계모니적 문화의 반영이다 그 결과 소수집단 혹은 억압받는 문화들만 소외된 형식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척 하고 차이를 무시하는 사회는 비 인간적일뿐만 아니라(왜냐하면 정체성을 억압하기 때문에) 미묘하고도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그 자체가 매우 차별적인 사회이다”⁴²⁾라고 한다. 이 관점에서 절차적 보편주의의 이름으로 차이를 외면한 보편주의는 그 자체가 특정 문화의 반영에 불과하다. 아시아적 가치가 인권논의에 던지는 자극은 이런 공동체 주의적 시각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공동체 주의적 시각을 서구의 개인주의적 인권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공동체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침해를 용납하는 공동체문화의 아시아적 가치는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여성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실존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첫째, 하나의 생명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야 하며, 둘째,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자연의 필연성으로부터 벗어난 영속성의 자신의 세계가 있어야 하며(성장, 성숙), 셋째, 말과 행위를 통한 이 지구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곧 그것은 탄생성과 사멸성의 조건으로 생명, 세계성, 다원성을 인간실존의 세 조건이며 라고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실천적 방향을 제시 한다.⁴³⁾

참고문헌

- 고병익, 『동아시아의 전통과 변용』, 문학과지성사, 1996.
- 국가인권위원회,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2.
-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4
- 김은실, 『신자유주의와 유교적 가부장제』, 조순경 외, 『한국의 근대성과 가부장제의 변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 김혜숙, 『여자, 그 분열된 존재』, 고려대학교부설 철학연구소 창립2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문, 1998. ; 『아시아적 가치와 여성주의: 책임의 도덕성과 권리의 정치학』, 철학연구회 '98년도 추계 발표회 발표문, 1998.

42) Charles Taylor, “승인 투쟁과 인권 : 차이의 정치를 향하여” 서울대 사회정의연구 실천모임 주최 공개강연, 동아시아 인권자료집, 1996, 10.2, p12-13

43) 이진우 외 역 (2005),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한길사, p 35-41

- 김현미,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 젠더, 인종, 계층의 경계를 넘어』, 도서출판 또하나의문화, 2005.
- 김중섭의, 『세계화와 인권의 발전』, 오름, 2004.
- 데니스 울트먼, 이수영 역, 『글로벌 섹스』, 이소출판사, 2003.
- 리처드 세넷, 조용 역,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문예출판사, 1998.
- 박노자, 『당신들의 대한민국 1, 2』, 한겨레출판사, 2006.
- 법무부, 『2002년도 출입국관리통계연보』, 법무부, 2003 ; 2004 ; 2005.
- 보건복지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 보건복지부, 2005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양동휴 외,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한울아카데미, 2005.
- 설동훈,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 총서 14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성공회대 인권평화연구소, 『동아시아 인권의 새로운 탐색』, 삼인, 2002.
- 설동훈 외, 『이민정책에 관한 연구』,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5
- 세계국제포럼(IFG, International Forum on Globalization), 이주명 역,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세계화, 비판을 넘어 대안으로』, 필맥, 2004.
- 송영배, 『세계화 시대의 유교적 윤리관의 의미』, 『철학』 62집, 한국철학회, 2000
- 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이삼열 & 강순원 외, 『세계화시대의 국제이해교육』, 한울아카데미, 2003.
- 여성부,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여성부, 2003.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이수자, 『지구화와 테크놀로지시대의 여성노동』 ; 김미경, 『이주와 여성 노동』 ; 김현미, 『친밀성의 전 지구적 상업화』, 『여성이론 11호』, 도서출판 여이연, 1998.
- 이금연, 『국내 국제결혼과 그 이해-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원탁토론회』, 이주여성쉼터 위움, 2003
- 이승환, 『누가 감히 전통을 욕되게 하는가』, 『전통과 현대』 창간호, 1997 ; 『유가사상의 철학적 재조명』,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 『아시아적 가치』, 전통과 현대, 1999
- 이상익, 『유가의 경제사상과 유교자본주의의 타당성 문제』, 『철학』 66권, 한국철학회, 2001
- 이진우 외 역,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05.
- 이창희, 『아시아적 가치와 경제성장의 정치적 동학-분석의 필요성과 가능성』, 『대한정치학회보』, 14집 1호, 2006.
- 임홍빈, 『인권의 이념과 아시아 가치론』, 아연출판부, 2003.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 2001.
- 장은주, 『문화적 차이와 인권』, 『철학연구』 49집, 철학연구회, 2002.

- 정귀순,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현실 :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한국내 이주여성 및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와 대책 : 이주여성인권연대 발족기념 제1회 정책워크숍 자료집』, 이주여성인권연대, 2001
- 정영선, 「아시아적 가치와 인권홍정논리」, 호남정치학회보 제11집, 1999.
- 지방의 국제화재단, 「특집기획 : 다인종시대의 지방정책」, 『월간 지방의국제화 6월호』, 지방의 국제화 재단, 2006.
- 프란시스 후쿠야마, 「위기이후 아시아적 가치가 사라 진다」, 『신동아』 8월호, 1998.
- 최협, 유명기 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국사회학회, 한국문화인류학회 공동 연구, 한울아카데미, 2004.
- 최의철, 『동아시아의 사상』, 예문원서, 2003.
- 최연식, 「중국에서본 유교자본주의론 비판」, 『동서연구』 제11권 제2호, 연세대학교 동서문화연구원, 1999.
- 피터 스토키, 김보영역, 『국제이주』, 이소출판사, 2004. ; 최수연 역, 『국경없는 노동자』,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 한국인권재단, 「제주인권학술회의2000-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 2000.
- 한국여성개발원,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인권보장 연구」, 2001. ; 「세계화와 아시아에서의 여성이주에 관한 연구」, 여성개발원, 2005.
-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2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외국연예인 국내취업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 한국문화정책 개발원, 2002.
- 한국염, 「이주여성에 관한 복경여성행동강령 이행 평가」, 이주여성인권센터, 2002. ; 「국내거주 이주여성의 인권실태와 과제」, 『이주여성인권센터 자료집』, 이주여성인권센터, 2004 ; 「지구화와 이주의 여성화, 한국이주여성의 실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05 ; 「정부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정책방향에 대한 고찰 :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원원전략은 가능한가?」, 「정부의 결혼이민자 정책 다시보기」 토론회자료집, 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 2006.
- 함재봉, 「유교전통과 인권사상」, 계간 『사상』겨울호, 1996.
- Chan Heng Chee, "Democracy, Evolution and Implementation : An Asian Perspective." in Robert Bartly, ed al. Democracy and Capitalism : Asian and American Perspective, Singapore :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1993.
- Daniel Bell et a, "Toward illiberal Democracy in Pacific Asia",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95.

- Donnelly. Jack, "Human Right and Asian Value: A Defence Western Universalism", in J. R Bauer and D. A Belln. *The East Asia Challenge for Human Right*, Cambridge U. 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eds. 1999
- IMO(2003a), "World Migration Report 2003", IMO Geneva 2003
- IMO(2003b), "Migration in a world of Global Change : New Strategies & Politics for New Realities", IMO Migration Policy and research. Geneva. 2003.
http://www.iom.int/DOCUMENT/GOVENING/Migration__change.phd.
- IMO(2003c), "Labour Migration in Asia : trends, challenge and policy responses in countries of origin", IMO, Geneva, 2003
- Irendale. R, "International Labour Migration in Asia : Trends, characteristic, Policy and Interstate Cooperation", in *Labour Migration in Asia : trends, challenge and policy responses in countries of origin*, IMO, Geneva, 2003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mportance od Considering Gender Issue in Migration",
<http://www.ilo.org/public/english/protection/migraet/projects/gender/index.htm>.
- Lauby, Jennifer & Oded Stark, "Individual Migration as a Family Stregy : Young Women in the Philippines", in *Population Studies*, 1998
- Mariann Marchand & Anne Sission Runyon, "Gender and Global Restructuring", New York: Routledge, 2000.
- Massey, Douglas S. et al, "World in Motion", Oxford, Clarendon Press, 1988.
- Meredith Woo Cummings, "The New Authoritarianism in East Asia," in *Current History*, Vol. 93. No 587 1994.
- Michel J. Piore, "Birds of Passage: Labor and Industrial Societies", Cambridge,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 Michel J. Piore "Another View on Migrant Workers", in *Dissent*. summer, 1980
- Minish Desai, "Transnational Solidarity : Women Agency, Structural Adjustment, and Globalization", in Nancy A Naples and Minish Desai, des, *Women's Activism and Glo Globalization : Linking Local Struggles and Transnational Politics*, New York: Routledge, 2002.
- Nancy A. Naples, "Changing the Terms: Community Activisim, Globalization, and the Dilemmas of Transnational Feminist Praxis", in Nancy A Naples and Minish Desai, des, *Women's Activism and Globalization : Linking Local Struggles and*

Transnational Politics, New York: Routledge, 2002

Sassen, Saskia,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The New Press, New York, 1998.

UNDP, "Investing in Development -A Practical Way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http://www.unmillenniumproject.org/reports/fullreport.htm>.

Young-Myung Kim, "Asian Style Democracy : A Critique from East Asia," Asian Survey, Vol. 37, No.12, 1997.

[Abstract]

Ideology of Liberalistic Human Rights and Asian Values : Policies on Woman Immigrants via Marriage

Moon, Young-hee

Ph. D. Candidate, Dep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Cheju National Univ.

Ideology of human rights has been developing into a worldwide issue for political discourse in today's world.

The ideology of human rights under the long tradition of western liberalism, is stipulat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s the world's universal value of human dignity, and has become the conceptual foundation to establish constitutions in countries of the world. It also became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the entire humanity and the substance for international laws, as well.

Yet, the ideology of human rights contains two conflicting values under the international political context of today's world. One is to urge defense of the basic rights and democracy on the basis that individual value has to be safeguarded under universal liberalistic ideology of human rights, although there may be a need for political interference by other states even at the cost of waging a war. The counter discourse defends the communal values based on a state's right to defend its own politics, with a pride on its cultural heritage, which creates a cultural ideology in an attempt to confront the act of making human rights instrumental: that is, the Asian value of emerged to confront such phenomena.

The Asian value was first asserted by Lee Kuan Yew and Mahatahir in the late 1970s. While it connotates a motive for political power, it also suggests a bold hypothesis for the revival of Asia as powered by the strong economic growth of eastern Asian countries combined with acritical notion of moral devastation in western

eastern Asian countries combined with acritical notion of moral devastation in western societies. They observed the practice of Confucian tradition in the eastern Asian countries and suggested a set of virtues as the content of Asian value to include: communal tradition, family worth, intensive work ethics, frugality, and education fever that respects authority, order, and consensus.

Since the beginning of the 1990s, such arguments widely became a point of dispute particularly among the Korean intelligentsia, and there exist a number of researches on the subject. However, the majority of the main discourse has been in the form of either supporting or opposing the Asian value politically, culturally, and conceptually: a rather dependent concept in abstract context than a concrete and analytical concept. The discourse incorporated a 'value intervening' concept that is established in the form of either a transcendental provision or a conception thus becoming a type of 'grand discourse' that needs to be analyzed instead of serving as a tool that could be utilized in analytical work and for application. As a result, the analytical applications to the reality arising from experiences have yet to be sufficiently accumulated in comparison to the various propositions and conceptions suggested. Recently, there is an emphasis on the need to apply the Asian value in a concrete and objective manner by segmenting it into more details in the aspect of political dynamics.

The paper explains why the Asian value differs from western liberalism by relating to women's roles. The women's roles have been overlooked for a long time but never received due attention while they represent the most important difference in the aspect of an Asian viewpoint. Hence, the attention to such an area is deserved as it consists of the exemplary illustrations of a social value that is greatly influential to both the economy and politics of a state. In addition, the paper reviews the Asian value dealing with the issues of the woman immigrants linking with human rights of the immigrants as they are usually exposed in a blind zone of human rights. Under the assumption of putting the Asian value on the same line as the Confucian value, the paper targets to analyze the 'Comprehensive Support Measures for Social Integration of Families with Woman Immigrants via Marriage,' in Korea particularly, as it is the domiciliation and the new suzerain state of Confucian culture and even

reexports the culture to China these days.

The paper reviews Korea's policy making processes and the details of the policy by analyzing the aforementioned target object and identifies the contents based on the Confucian tradition a score Asian value. At the same time, it aims to reveal that the universal concept of human rights is inappropriate with the Asian value as it is deeply influenced by the Confucian tradition in which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is justified.

Subject words: ideology of liberalistic human rights, Asian value, Comprehensive Support Measures for Social Integration of Families with Woman Immigrants via Marriage' in Korea, women's human rights, immigrants, Confucianism

Key words : Liberalism, Values of Asian, Woman Immigrants via Marriage, Human Rights, Korea Policies on Woman Immigrants via Marriage.